

# 이재명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

(경기도지사)

국회 토론회서 부동산 정책비전 제시  
감독기구 설치 등 부동산 시장법 추진  
투기 목적 부동산, 규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토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고품질 저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비필수 부동산의 강력 규제 등을 '부동산 안정화'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법(가칭)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시장 교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이 핵심이다.

심이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주택은 적은 편인데 5~10년 지나 분양하니 안전판이 없다”며 “고품질 낮은 가격의 경기도식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고 금융·거래 규제

같은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가해야 한다”며 이른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국민의 조세 저항과 관련 “조세 효능감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과 관련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생각)하면 조세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전세는 아니어도 일부나마(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나쁜 언론 환경”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해 “합

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이 국민에게) ‘세입은 뺏긴 것,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을 낮추는 게 고소득자의 이익이 된다. (반대로 언론에서) 세출만 보여주면 부자들은 ‘세금 내는데 왜 혜택을 못 보냐’는 정책 저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부분을 확인하면(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증세) 동의율이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초가 뚜렷했으나, 관료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는 “관료, 토건 세력,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지 불이행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윤석열, 연일 ‘탈원전’ 비판… 보수표심 공략

민심투어 첫 행선지로 카이스트  
“에너지정책, 전문적 검토 거쳐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민심투어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행선지로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전날(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난 데 이어 연이탈원전 비판 행보다. 야권 지지자 결집을 위해 탈원전 정책 비판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첫 민심투어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카이스트를 방문, 원자력 양자공학과 출신 연구원, 석·박사 과정생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전에 전문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시스

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환경,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지)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기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수소 에너지 생산에 있어 원자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사리 탈원전을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에 함께한 구현우(27, 원자력 양자공학과 석사과정) 씨는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꿈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인재가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입학 당시 가졌던 꿈과 희망이 무너지게 됐다”며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 靑, 대깨문 논란에 “말 안하는 게 맞는 듯”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비하 발언인 ‘대깨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가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거고, 또 다른 사안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전날(5일) 대선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여당인 민주당 당내 경선 현안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5일)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당 대선 후보로) 되면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고 안 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송 대표를 겨냥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부의 송 대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도 어제(5일) ‘정치의 계절이 왔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

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과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까지 고려한 듯 “선거나 정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도와주면 좋겠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곧 방역이나 민생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정부의 태도를 흐트러놓는 거 때문에 자제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최영훈 기자

## 韓, 선진국 지위 변경… 文 “자랑스러운 성과”

운크타드, 선진국 지위변경 가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운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앞서 운크타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 당시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 속 한국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 공포에 앞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어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보상과 관련)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에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훈 기자